

**2023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법학특채) 경찰학(해설)

**【2023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법학특채) 경찰학 정답표】**

문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②	④	④	①	②	①	②	③	②	②	④	④	①	②	③	②	①	④	④	③

**■ 분야별 출제 구분 ■**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경찰학의 기초이론	7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9번
한국·외국경찰사	1	7번
경찰행정법 (조직·공무원·작용·구제)	7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20번
경찰행정학	4	10번, 15번, 16번, 17번
분야별 경찰활동	1	18번
구별기준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 편재에 따름(강사별 상이할 수 있음)	

**■ 전체 총평 ■**

- ① 2023년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찰학 문제는 전체적인 난이도를 ‘중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일반순경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90점 이상 정도의 점수 획득이 필요하다.
- ③ 법학특채 수험생들의 경우 85점 이상이면 충분한 합격권일 것이다.

**■ 대표적인 특징 ■**

- ① 전체적으로 中 수준의 문제와 下 수준의 문제로 구성되었다. 다만, 10번 문제, 13번 문제, 14번 문제, 18번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자칫 실수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② 전체 20문제가 출제되면서도, 각론 분야에서 1문제(집시법)가 출제된 것은 다소 의외이다.

**■ 향후 공부방법론 ■**

- ① 경찰학 총론 파트는 넓고 깊게 공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론 파트는 기출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좁고 얇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적정한 안배가 중요하다 하겠다.
- ② 이론 + 조문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판례에 대한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 ① 본 해설지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② 본 해설지의 해설 내용을 차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저자의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01】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제도적으로 발전해 온 개념**으로서,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 현대의 법 규정에 경찰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내용 및 성질을 불문하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업무에 속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분야별 경찰활동)으로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공공안전정보, 안보수사(보안), 외사 등이 해당한다. ㉣ **권력적 활동은 물론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해당한다. 보기의 내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0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2항).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8조).

- ㉠ 입건 전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청탁 또는 경찰 인사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정기회의에 3회 불참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제1항). 위촉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제2항).

- ㉠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거사무관계자 및 정당의 당원

**【문제 0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경찰의 부패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것은 『썩은 사과 가설』에 해당한다. 즉,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경찰관 개인 자체에게 있다고 한다.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한 니더호퍼(A. Neitherhoffer), 로벅(J. Roebuck), 바커(T. Barker) 등은 경찰부패의 원인을 경찰문화에서 찾고, **신임경찰관들은 선배경찰관들의 부패행위에서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신임경찰관들은 선배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문화에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에 들어서게 되며,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조장된다. 이러한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법규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 발생한다. **부패의 원인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본다.

**【문제 04】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다(예 : 자율방범대, 시민경찰학교, 생활안전협의회, 범죄예방교실 등).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으며, 업무평가의 방식은 범죄 및 무질서의 감소율에 있고, 효율성의 측정은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의 정도로 평가된다.** 보기의 내용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구 분	전통적인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주 체	경찰이 법집행의 책임을 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임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음
경찰의 역할	범죄해결(법집행자, 범죄해결자)	문제해결(서비스제공, 문제해결자)
업무평가 방식	범인 검거율(사후통제)	범죄 및 무질서의 감소율(사전통제)
업무의 우선순위	범죄와 폭력의 퇴치	범죄와 폭력의 퇴치 + 주민 문제해결
효율성의 측정	범죄 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의 정도
조직구조	집권화	분권화
타 기관과의 관계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동·상생구조
강조사항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법의 엄격한 준수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강조

**【문제 05】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윤리강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비진정성의 조장**』(비자발성의 조장)은 경찰윤리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기의 설명은 『**실행가능성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다.

**【참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구 분	내 용
실행가능성의 문제	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 및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소주의의 위험	경찰윤리강령은 경찰관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 및 봉사를 하려다가도 경찰윤리강령에 포함된 정도의 수준으로만 근무를 함으로써 오히려 경찰윤리강령이 근무수행의 최소기준화가 되는 위험이 있다.
냉소주의의 문제	경찰윤리강령은 직원들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제정하여 하달된 것으로 냉소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
비자발성의 조장	경찰윤리강령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된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행위중심적 성격	경찰윤리강령이 특정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이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
우선순위 미결정	경찰윤리강령이 구체적인 경우 그보다 더 곤란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문제 06】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구체적 위험은 경찰의 권력적 개입의 법적 요건이 된다.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가능하다. 『오상위험』이란 추측상 위험 또는 추정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판단을 할 때, 외관적 위험도 위험혐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지 않고 경찰이 객관적 근거 없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인정해서 개입한 경우를 의미한다. 오상위험의 경우에 경찰권의 발동은 불가하고, 이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방지조치는 위법하다. 경찰관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 07】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1910년 10월 평양 승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체포되어 20일간 구금되었으며,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된 인물은 『안택결 총경』이다. 안택결 총경은 1946년 5월 미군정하 제1기 여성경찰간부로 임용되며, 경찰에 입직하였다. 1952년부터 2년 동안 서울여자경찰서장을 역임하며 풍속·소년·여성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57년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로 발령받은 후 후배경찰 교육에 힘쓰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안종삼 서장』은 구레경찰서 서장으로 재직 시 1950년 7월 24일 전쟁발발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 명령이 내려오자 480명의 예비검속자 앞에서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라고 연설한 후 전원을 방면하여 구명하였다.

**【문제 0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내용이 적법(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하고 타당(실현 가능하고 명백한)힐 것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참고】** 훈령의 요건

구 분	내 용
형식적 요건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상급경찰행정관청이 발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하급경찰행정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③ 하급경찰행정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하급 기관에게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훈령을 발할 수 없다.
실질적 요건	① 훈령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법률우위의 원칙). ②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실현 가능하고 명백하여야 한다.

**【문제 09】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참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외부임용의 경우에 한함)

구 분	내 용
임용자격	<p>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p> <p>① <b>10년 이상</b>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b>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b></p> <p>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b>10년 이상 있었던 사람</b></p> <p>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b>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b></p> <p>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b>10년 이상 있었던 사람</b></p> <p>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b>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b></p>
결격사유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p> <p>①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b>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p> <p>③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b>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p> <p>④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b>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p> <p>⑤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b>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b></p>

**【문제 10】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上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대통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다만, 대통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에 의한 통제는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③ (×) 국가경찰위원회제도는 민주적 통제에 해당하며,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④ (×)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행정소송) 및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감사권·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된다

**【문제 11】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행정주체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행정질서벌(경찰질서벌)은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해당한다.

**【참고】**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구 분	종 류	내 용
전통적 수단	경찰강제 (직접적 수단)	①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② 경찰상 즉시강제(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③ 경찰상 조사(현재는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 인정)
	경찰벌 (간접적 수단)	① 경찰형벌(형벌 부과) ② 경찰질서벌(과태료 부과)
새로운 수단	금전적 제재	① 과징금(부가금) ② 가산세 ③ 가산금(증가산금)
	비금전적 제재	① 공급거부 ② 명단공개(경찰상 공표) ③ 관허사업의 제한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⑤ 취업제한 ⑥ 해외여행제한

**【문제 12】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 본문).

**【문제 1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현장사용자 ×)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 억제

**【문제 14】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위원장이 지정하는 ×)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징계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2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문제 15】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공식적 접촉의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참고】** 통솔범위의 결정요인

구 분	내 용
조직의 규모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공식적 접촉의 가능성 증가로 인하여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조직 및 업무의 성질	전문적·창의적·복잡한 업무보다는 동질적·단순한 업무일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상황 조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상황일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공간적 요인	① 지리적 분포가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일수록 의사소통이나 협조의 용이성 때문에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② 교통기관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시간적 요인	안정된 기성조직일수록 신설조직보다는 통솔범위가 넓다.
계층의 수	① 통솔범위는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좁아지고, 계층의 수가 적어질수록 넓어진다. ② 즉, 통솔범위와 계층의 수는 반비례관계이다.
경찰관의 의사전달	① 경찰관 사이에 의사전달이 잘 될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②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할수록 통솔범위는 넓다.
관리자 및 부하의 능력	관리자 및 부하가 유능하고 훈련이 잘 된 경우일수록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참모기관과 정보관리체계	능률적인 참모제도나 정보관리체제는 통솔범위를 넓혀준다.

**【문제 16】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인간의 5가지 기본욕구가 서로 연관되어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순차적·상향적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요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생리적 욕구』(제1단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욕구로서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욕구이다(예 : 냉·난방시설, 기본급여, 근무 및 휴식조건, 편안한 제복, 노동력 절약 장비, 휴양제도, 포상휴가 등). 신분보장과 연금제도 등은 『안전의 욕구』(제2단계)에 해당한다.

**【문제 17】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의 의결 전에**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을 말한다(「헌법」 제54조 제3항).

**【문제 18】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양 및 참가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인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래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성질상 시위에 해당한다.

**【문제 19】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2조).

【문제 20】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대상자의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에는 ㉠ 협조적 통제, ㉡ 접촉 통제, ㉢ 저위험 물리력, ㉣ 중위험 물리력, ㉤ 고위험 물리력이 있다. 여기서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예 : 손바닥·주먹·발 등 신체 부위를 이용한 가격,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 부위를 찌르거나 가격, 방패로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전자충격기 사용). 보기에서의 분사기 사용은 『저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 경찰관의 대응 수준이다.